

‘검사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檢 개혁 입법 드라이브

민주 “김여사와 야권 수사 형평성 부족”...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에는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소개했다.

이는 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 측은 “개정안이 마련되면 검사들의 청렴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을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지난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

집을 규제하는 법안을, 이성운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여권에 대한 수사과 이재명 대표·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에 대한 수사 간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연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나와 김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

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공직자 배우자가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도 무죄라면 공직사회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하는 상황을 두고도 “자기들(여권) 수사는 안 하고 (뇌물죄로)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

찰개혁’ 법안의 처리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과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는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도 동참할 예정이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방탄용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는 범죄”

“의료진 협박 안돼... 엄중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0일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 가능하다고 밝히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는 만큼 의료계도 조속히 협의체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의료계에 여러 형태의 접촉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 단체가 있는지에 대해 “아직 선불리 이야기하기 이른 단계”라며 “단체별로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 (이를 바꾸면)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대립관란이 일어난다”며 “그래서 25년 정원 제조정 문제는 현재 사실 상 어렵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계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와 관련,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등을 통해 현실적 의료 개혁 방안을 논의할 단계이지, 사과나 책임,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거론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2026년 의대 증원 문제는 원점에서 재논의 가능하다”며 “들어오기 전에 자부 조건을 걸면 대화 자체가 안 되지 않겠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테니 들어와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새미래민주 “광주서 지지 보내달라”

‘새로운미래’ 서 당명 변경...광주서 현장 최고위·빛고을 선언식

새미래민주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로 면면히 이어지는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새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제1차 현장 최고위위원회 열고 “대한민국 정치의 회초리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병헌 대표, 이미영·이근규·진해찬·정형호·서효영 최고위원, 남평호 사무총장, 김학실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병헌 대표는 최고위 후 브리핑룸에서 ‘새미래 민주당 빛고을 선언식’을 열고 “지난 대통령선거는 국민들이 ‘덜 나쁜’ 후보 선택을 강요받은 여처 구니없는 선거였다”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제대로 된 평가는 없었다. 2027년 대선에

서 그 후보를 다시 선수로 내놓는다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국회의원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막는 커녕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며 “민생 지키기보다 이재명 지키기에만 올인 중인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언급한 뒤 “3총 3김”이 뭉치면 민주당 진영은 더 강하고 포용력 있는 세력이 돼 이재명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민주당 안의 양심파와 조국혁신당, 애국적 시민 세력과 함께 민주 세력 재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난 총선 낙선에

대해 “대선 당시 이낙연의 핵심 지역인 광주·전남 득표율은 85%로 전국 최고였다”며 “(이 전 대표의 낙선은) 민주당이 호남과 광주시민을 상대로 지속해 온 이낙연 후보에 대한 철저한 가시라이팅이 그 효과를 거둔 탓”이라고 주장했다.

지구당 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구조를 심화시켜 다당제를 막는 개악이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10·16 영광·곡성 재선거와 이후 선거에 대해서는 “올해는 제2의 창당을 하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확실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는 전국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광주에서 제2의 창당을 선언한 새민주가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민주 세력 대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주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대 총선 당시 ‘새로운미래’로 창당했던 새민주당은 지난 7일 당 이름을 ‘새미래민주당’으로 변경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박근혜 ‘특별감찰관 강제 임명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근혜(광주광산갑) 국회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무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명목으로 10억 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



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 받은 날부터 1명을 3일 이내에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

박근혜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하여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